2021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자료집

- **주 제** _ 차기정부에서의 지역문화 이슈
- **일 시** _ 2021. 10. 15.(금), 오후 2시
- **주최 및 주관** 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21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 웹세미나 개요

○ 주　제 : 차기정부에서의 지역문화 이슈

○ 일　시 : 2021. 10. 15.(금), 오후 2시

○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장　소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제조창

○ 진행방식 : 웹세미나(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 웹세미나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실장	
14:10-15:50	**1부 100분 이슈 토론** **〈사회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정숙 담양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실장	
15:50-16:00	휴식기간	
16:00-17:00	**2부 종합 60분** **〈사회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부_100분 이슈 토론 ····· 1

□ 첫 번째 이슈 : 지역문화분권을 향하여 ····· 3

□ 두 번째 이슈 :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 ····· 5

□ 세 번째 이슈 : 제도, 예산과 조직의 혁신 ····· 7

□ 네 번째 이슈 : 새로운 예술 정책을 바라며 ····· 8

□ 다섯 번째 이슈 :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전환과 지역 협력관계망 확장 ·· 11

2부_종합 60분 토론 ····· 13

부록 ····· 18

□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영상 ····· 18

□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속기록(별첨) ····· 18

1부_100분 이슈 토론

〈사회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실장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 첫 번째 이슈 : 지역문화분권을 향하여

○ 지역문화분권이란, 문화분권을 통해서 결국 문화 자치로 가는 방향성을 찾는 것

- 문화정책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의 주민 참여, 그리고 주도적인 기획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주제를 발굴하고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존의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참여 형태의 변화가 상향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바 지자체와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자치력을 함께 배양시킬 필요가 있음
- 소수 실무자 중심의 사업 운영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의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운영 기획이 필요함

○ 상향식 사업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있어서 재구조 필요

-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업구조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설계 방식은 사업 수행이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의 반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음. 또한 문화는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도심권이나 서울의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과 재단에 경계선을 두고 있지만 시민들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권역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함
-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하위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동등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형태보다는 독립적 문화청 형태 등이 보다 유용

- 예산을 통제받고 또 예산 결정자들은 비전문가들인데 이 사업을 이해시켜야 하고, 무형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과정이 끈기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지역진흥사업의 특징상 장기적 목표, 또는 비전을 세우기에 매우 어려움. 이에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형태보다는 독립적 문화청 형태 등이 보다 유용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전략 수정 필요 : 경쟁에서 문화권으로 협력 및 네트워크

- 그동안 이해해왔던 문화분권은 주로 중앙정부에 대항한 지역정부의 어떤 요구사항이란 개념이었음. 그런데 최근에, 특히 부산·울산·경남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문화권이 그동안은 Cultural Rights, 문화 권리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Cultural Sphere임. 문화 권역의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호남권, 충청권 등의 권

역별로 문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 설정 필요한 시점임

- 그동안 문화정책 추진 방식이 공모 등을 통한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공진의 방식으로 문화권리를 확보할 필요 있음. 프랑스, 독일, 영국의 지역문화정책 사례들을 보면 문화권역별 협력과 공존을 오히려 장려하는 측면이 있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문화 권역의 문화 권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문화권은 인문지리학적인 권역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망하는 것임

○ 분권은 쟁취의 영역, 분권을 위해서는 결국 자치 역량 필요

- 분권은 국가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의 영역임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고 생활권 내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역량과 에너지들이 모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거대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이양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문화력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치의 영역 관점에서 나눠볼 필요 있으며, 문화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분권, 쟁취의 영역도 있지만 자치라고 하는 현장 역량과 지역 역량에 대한 이슈들도 성취해야 하는 것임. 분권은 결국 지자치 역량에서 발현될 수 있음

○ 문화청 문제 광역 단위에서, 지방정부에서 고민 필요

- 문화청 문제 광역 단위에서, 지방정부에서 고민 필요. 문화부 내의 문화청 혹은 예술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화청에 준하는 어떤 기구 필요함
- 광역 같은 경우는 국 차원이나 그것을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올려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지사급의 문화부지사라든지 아니면 지방 문화장관 정도의 수준으로 개념을 달리해서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자치 분권과 궤를 함께할 수 있는 제도 검토 필요

○ 지자체들 간에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역할 필요

- 지역의 문화 분권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있음. 문화분권의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또 다른 숙제로 대두됨
- 강원권 같은 경우에 춘천·원주·강릉 같은 거점 도시들도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인근 도시들의 문화적 인프라나 격차 있으나 지역 안에서의 지원 사업, 어떤 지원의 구도가 그 도시를 벗어나는 지원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광역 차원의 논의와 역할 중요함

○ **지역분권에서 제일 먼저 가능한 것은 문화권**

- 지금까지 정책의 드라이브는 행정권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지역분권에서 제일 먼저 가능한 것이 문화권임. 실제로, 예를 들면 경상도 예술가들은 부산에서도 활동하고 부산 거주 예술가들은 경남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음. 즉, 울산·경남·부산 등과 같이 문화 접점 지역이 항상 존재함
- 부산문화재단만 하더라도 예술가 창작 지원을 위해서 연간 40억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30억, 울산이 20억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에 분권이라는 가치들은 다 보장되어 있으나 법률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좀 더 가치 지향적이어야 함. 이에 분권보다는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어떻게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더 많은 고민 필요함. 권한 위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서로 신뢰하지 못함
- 권한 위임을 위한 거버넌스 역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거버넌스라는 것이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자문회의 몇 번 정도 하면서 이것이 거버넌스를 했다고 갈음해버리는 형식적 거버넌스가 매우 많았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숙의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서 권한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제일 먼저 고민되어야 함.

□ 두 번째 이슈 :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

○ **거버넌스 안에서의 책임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조 설계 필요**

- 지역에 맞고 지역에 좀 더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을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없음
- 지자체 안에서도 문화재단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사업기관, 주요 기관들이 행정으로부터 이 문화정책의 이 지역으로까지 오는 그 전달의 구조 체계 안에서 전달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소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 동등한 의식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인식이 필요함
-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예산 등 행정에서 정하고 전달되는 방식임. 앞으로는 지역의 중간 지원조직이든 시민, 예술가, 이 구조들이 모두 거버넌스 구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작동이 쉽지 않음

-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은 자율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책임 행동인데,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음

○ **문화생태계 안에서 거버넌스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지속 성장의 가능성**

- 기초 지역으로 올수록 사실은 다양한 문화 수행 조직들 간에 충돌 혹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이러한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각 조직의 예산이나 사업의 자율성이 없이 중앙부처나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예산과 사업틀 안에서 나누는 방식임

- 그러다 보니 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없고 어떤 부분은 겹치고 어떤 부분은 지역의 문화적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화 공백이 발생함. 자율성의 한계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문제로 이어져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약화함
- 하향식의 짜여진 판에서 나눠먹기식의, 경쟁 아닌 경쟁은 지역 안에서 지정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저해하고, 근본적으로 각 실행 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게 함
- 자율적이면서 지역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업에 책임을 지며, 함께 연대하는 그런 건강한 문화 공동체로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함. 이에 정기적으로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지역의 현안에 기초한 리빙랩 등을 기획하고 있으나 결국은 각 기초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예산, 인력의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의 방향 전환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 필요

- 지역문화를 진행하는 주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만한 전문성이라든지 자립성, 독립성 중요할 것임. 탑다운 방식도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예산 확보도 그렇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집행하는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집행방식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예상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바텀 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방향 전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 왔던 문화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가치 지향의 전환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역할이라든지 기능 조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바텀 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등등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함

○ 문화재단, 시민 철학이 바탕이 될 때 문화 자치와 분권 가능

- 거버넌스의 방향은 시민으로 향하고 있음. 재단의 출발이 사실은 거버넌스 모델이었는데 지금 당연직 이사, 또 거기에 공공 관리·감독 기관들이 이사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민사회나 예술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는 것 아님. 문화예술의 수혜자인 시민의 니즈 수렴과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그러기 위해서 재단은 시민 철학 가져야 함. 시민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철학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함. 시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때 앞서 얘기했던 문화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달성 가능할 것임. 문화재단 공공기관들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옹호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 이상에서 논의된 거버넌스가 문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기관으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듯,

문화정책이 하나의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의제들과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확장성은 더 있어야 됨

□ 세 번째 이슈 : 제도, 예산과 조직의 혁신

○ 총예산제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 방식 검토가 필요

-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재원은 사실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 공공 재정의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음. 법령 및 하위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에 운영의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에 매우 어려우며, 이에 지역문화재단 운영 및 재원 활용 등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는 예산의 독립을 바라지 않고 있고 사실 이제 수익도 그 지자체에 다 반납하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나 위탁사업을 다수 진행하는 일부 재단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익 사업,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매우 필요함
- 지자체 문화 재정의 총예산제와 비율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상황에 맞는 보충적 문화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임. 지자체 문화예산은 눈에 보이는 공간 건립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역 내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여건이 모두 다름. 시설 조성비와 중장기적 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며 단년도 예산이 아닌 중장기적 예산이 매우 필요함
-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많은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 또한 사실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개별 도시진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큰 메리트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임
- 총예산제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 방식 검토가 필요함. 총예산에 맞춰 지역의 주민, 예술인,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 예산에 대한 편성 기구 마련 제안함

○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

- 문화재단의 어떤 독립적 의사결정과 위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행정부서의 어떤 보조기구, 그러니까 실행 기구에서 탈피해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함.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문화분권과 문화 자치, 또 문화예술 지역분권 실현이나 거버넌스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문화재단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 필요함
- 지역 특성화나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재단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지정해서 관련 예산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문화정책 예산 지원의 근거로써 재단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 문화재단의 조직 혁신에 대해서는 문화정책 또 문화행정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시 문화 역량을 진단하고 관찰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 필요하지만 사실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재정적 여건, 또 인력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 이런 것들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 이에 대안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문화위원회나 아니면 전문 활동가 그룹의 네트워크를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예 : 문화리빙랩 등) 마련 고민 필요함

○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의 중심기관**

-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요구하는 것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임. 2차 국가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도 총액예산제가 들어가 있지만, 단 한 군데도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있음
- 문화도시의 필수 요건으로 또 문화영향평가 받으라고 하듯이 어느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총액예산제를 우리는 도입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들도 방법적으로 이것은 법을 안 고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함
- 예산의 어떤 투명하고 이런 정보 공개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현실 냉정히 반성할 필요 있음. 그러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것임
- 그러므로 차기정부에는 130개의 지역문화재단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에드보커시 활동의 제일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원래 문화정책의,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표현의 자유, 분권, 자치 이런 것을 확보 해 달라는 요구가 필요함

○ **자체 재원조성에 대한 노력 필요**

- 예산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 전달 체계에서의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어떤 자치예산,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기초문화재단은 원래 출연금으로 거의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사업에 내몰리게 되다 보니까 민경보조도 섞이고 공공기관 민간위탁금도 섞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복잡해짐
-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우리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주는 기부금임. 그러므로 출연금을 기반으로 문화재단의 정관을 바로잡고 고유 목적사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
- 출연금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히려 안정적인 예산 계획을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체 재원조성에 대한 노력도 중요함.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기금, 계속 문화진흥법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 외 지역문화재단들 예산 다 합치면 1조 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지렛대 삼아 금융권에 지역문화진흥 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제안 등이 있음

□ 네 번째 이슈 : 새로운 예술 정책을 바라며

○ **지역문화 전문 인력에 대한 인증제도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증할 수가 없고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문화기획자나 문화행정가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함

-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의 예술정책 중에 일단 지역 예술인들의 법 관련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활력소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을 제도 안에서 포용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문화 활동에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제도 등이 필요함

○ 예술분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침 필요

- 지역문화재단 혹은 예술 분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편성지침 마련 필요함. 지역의 문화재단은 불안정한 출자·출연기관 편성지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예술 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에 제약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지만 대부분 시행규칙은 행자부와 개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게 하여 사실은 개별 지자체의 주도권이 굉장히 높게 있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음

○ 지역재단 주축이 되어 중간 조직 연대, 지역의 생활예술인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지금 가장 지역 안에서 민감하고 또 심각한 부분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부족임.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 내 각종 문화사업들에는 전문기획사,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지, 실제 지역의 기획자나 활동가들의 영역이 별로 없음. 왜냐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제안서나 각종 보고서, 평가 방식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임
- 그러나 담양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의 소도시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죽물시장과 수많은 공예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생활예술인들이 있음. 그런데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지역 내 생태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나 시스템 강화 필요함
-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지원대상이 지금까지는 거의 전문예술인이었음. 하지만 농촌중심 지역으로 올수록 정말 생활예술인들이 많음. 예를 들어 전문적인 학력은 없으시지만 나름대로 50년, 60년을 한결같이 대나무 공예나 각종 생활 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인증 받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저는 지역 안의 다양한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또 지역 안의 생활예술인들의 축적된 역량을 인증하고 가능하다면 사업적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함
-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로 지역문화사업이 활용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추진등과 관련하여 지역 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보면 이것 역시도 굉장히 전문성이나 획일화된 프레임 때문에 카르텔화 되어 있는 전문 기획사들의 영역임. 이에 정작 지역 안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와도 지역 문화 예술인들, 생활예술인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음. 이에 지역 문화예술 영역의 시민 주체 발굴, 그와 함께

지역 예술인, 생활예술문화의 참여와 협력의 토대를 확장하고 거기에 자원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필요함

- 지역의 경우, 중간 조직 거버넌스가 사실 지역의 현안 파악 및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주체들과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가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오는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지역 주체 발굴과 지역 예술과, 지역 생활예술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자원들이 지역 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재단이 주축이 되어 중간 조직들이 연대하고 특히 지역의 생활예술인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지역에 맞는 전업예술가 기준 및 장치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 생활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힘은 지역사회의 시민력과 주민력을 높여서, 창의력을 높여서 도시 전체가 바꿀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지만 직업군으로서의 예술인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문화예술 쪽의 전업예술인 지원 강화 필요함. 현재 전업예술인을 걸러내는 장치 중 예술인활동증명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에 지역에 맞는 전업예술가들을 다시 골라낼 수 있는 별도 장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전업예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창작활동의 안전망을 가지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들을 만들어 내자라는 차원 안에서 콘텐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업예술인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안전망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더 넘어서는 범위의 규제나 재정이나 법률이나 혹은 뭐 방식들이 많이 있음
- 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루틴하게 자기 소득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는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어 있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로를 바꾸거나 예술을 포기하거나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런 직업적 바꿈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에 대한 상실로 인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은 지역의 예술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해 내는 것이 필요함. 예술정책에서 봤을 때 단순히 창작활동 지원이 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 혹은 문화 안전망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기존에 먼저 산업화된 영화예술이라든가 공연예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화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앞서간 산업화가 갖고 왔던 제도들을 벤치마킹한다거나, 시민 펀딩 같은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 문화예술에서의 공공의 OTT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문화예술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등 지역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온라인 안에서 모두 다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플랫폼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 문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직접지원은 잘못하면 30년 문화정책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사실 있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프로세스를 잘못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잘못 세운다든지 투명하지 않다든지 협·단체 중심으로 멤버십을 다 받아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그냥 다 해 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풀려서 기존의 정책 모집단, 예를 들면 한 15만 명 이것이 아니라 30만 명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책의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함
- 지금 보편적 복지 문제가 차기 정부에서 좀 정리되고 거기에서 취약계층, 특수계층, 또 공공재로서 가치가 있는 예술인 같은 특수계층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틀 안에서 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나면 예술인 복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음

□ 다섯 번째 이슈 :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전환과 지역 협력관계망 확장

○ **보다 포괄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마련 필요**

- 문화다양성은 현재 문체부 문화정책과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단일 사업으로 하기에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범주라든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포괄정책이 필요함. 정부의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서 지자체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는 것 필요함. 그러나 현재 지자체 문화다양성 사업은 다문화 사업 내지는 문화예술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자체 실행 계획들 획일화가 되어가고 있음
-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화 격차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문화 다양성 개념을 좀 더 관리 체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책화될 필요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환이나 그것을 위한 지역 내에서 협력 관계망의 확장 필요**

- 문화 다양성 추구를 위해서는 문화생태계 안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 중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문화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의식, 의제 발굴, 그다음에 주체들의 자율적인 대안활동을 우리가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 생태계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을 위해서는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성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인지되거나 현장에서 발굴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다양성의 범위나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다변적이고 방대한데 지역 내 정책이나 기존의 사업들은 아직도 지역 내 실질적인 수요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그 한계가 지역 안에서

명확히 있기 때문에 문화 주체들, 혹은 중앙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검토 필요함

- 지역 내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연결 지점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 발굴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함. 그러나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문제들의 깊이나 폭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어떻게 정책이나 공동의 사업으로 발굴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지 함께 고민 필요함

○ 지역주의 현실 속에서 구호만 남은 문화다양성

- 우리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는 문화 표현의 자유이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혈연·지연·학연·지역성 이것이 다 겹치면서 구호만 남는 Cultural Diversity가 되어 버림.
- 특히나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 다양성의 관점이 참 어려운데, 이것이 지역 차원이 아니라 문화권역별로 좀 더 확장되다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임.
- 지역문화의 폐쇄성과 문화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폐쇄성부터 일단 열 필요 있음. 즉, 문화로서 다른 것하고 문화로서 차별을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임

○ 단순 지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지원 정책 다각화 필요

- 단순히 돈을 지원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함. 정보의 지원 이외에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함
- 그동안에 전문예술 지원 사업으로만 구도화되었던 것을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이 소품이나 작품 보관소 같은 공간을 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예술 창작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예술 생태계가 변화해 가는 것들을 바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감성들을 재단이 갖고 있어야겠고, 그냥 단순 지원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함

2부_종합 60분 토론

〈사회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분권을 넘어 문화 자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

- 2000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창작 지원이랄지 예술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어떤 선순환이라는 관점을 많이 생각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됨.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 현장의 현실의 문제를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좀 나이브했으며,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라는 관점보다도 현장 예술가들에 있어서 삶의 어떤 존재론적 측면에 저는 포커싱될 필요 있음
- 현재 지역문화분권과 자치에 있어서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①관점의 층위임. 즉,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함. 그러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관점의 어떤 전환이 필요함. ②태도에 있음. 결국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입장, 거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층위들이 있음. 시민이나 예술가나 기획자나 문화행정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권과 자치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점을 전환하고 그것의 행위적 주체들의 태도를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문화 자치에 대한 공식적으로 의제화 된 것이 어떤 담론의 층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다음 네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함. 하나는 법적·제도적 환경, 두 번째는 재정, 세 번째는 추진 체계 마지막은 가장 근본적인 지역 자체의 역량임. 이 네 가지 층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요구하고 이것을 법제화, 또는 제도화, 그리고 네트워크화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문화분권에서 문화 자치로 나아가는 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현재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우리 문화예술 영역으로 따지면 문체부와 또 지역에 있어서의 광역시·도, 지자체의 문화 관련된 실국, 과,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예술인 복지재단, 이러한 어떤 공공조직의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첩되어 있음. 그렇다고 광역과 기초가 경쟁하는 구도들, 또는 광역·기초 내지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전달 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어떤 역할 분담, 또는 지역 내에서의 각 기관 또는 단체들이 해야 할 부분의 역할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이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부분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임
- 대부분의 모든 국가, 또는 광역시·도나 아마 기초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지자체 문화 예산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복성이 있음. 그것은 이미 정부에 있어서의 문화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동안 운영됐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임. 그래서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먼 추상적인 미래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놓인 이 현실의 문제들을 재편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들

부터 재 세팅되는 작업들이 됐을 때 이런 어떤 논의들이 분권에서 문화 자치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문화 자치를 위한 지역생태계 마련 필요**

- 21세기 지구촌이나 모든 가치가 상생으로 가고 있음.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으로 가게 하는 제도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의 전환에 맞게 제도와 형식들 변화 필요함. 투명성이나 공공성, 절차적인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치를 저해하는 이런 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
- 문화 자치가 별도로 혼자 있을 수 없음. 혼자만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의 발전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금 자치 분권이 가속도로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역시도 상세히 보고 준비해야 함. 정부가 440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했는데 440개 과제 안에 문화는 얼마나 있는지, 그 재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계적인 준비와 대비 해야함
- 정부가 지방자치에서 초광역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방자치의 흐름에 맞춰서 과연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함.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일수록 기초, 광역, 정부의 역할 분담 필요함
- 현재 공모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음. 이런 공모체계들을 조금 더 상설화해서 기초문화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회계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 있음. 지금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에 대한 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있지만 목적이나 공동의 설립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목적들을 만들고 여기에 일괄 회계 체계들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목적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계 체계(가칭, “문화특교세”)를 마련 필요함

○ **문화분권을 위한 자체 이슈의 지속가능성 필요**

- 총액예산제 제도,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에 임팩트 있게 작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물론 재단의 효율성, 독립성, 자율성, 어떻게 보면 재단의 미션임. 그것에 가장 초점을 둔다면 총액예산제를 통해서 그 예산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바텀 업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딱 좋은 구조인데 이것을 하려면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 즉, 고도의 전문성과 성숙도가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행정과 같이 손을 맞잡아 가는 그러한 구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구조는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
- 문화재단이나 어떤 것을 실행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사업, 이런 쪽에는 기획자가 전문가분이 많은데 재단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조직을 놓고 보는, 그리고 이 재단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자분들이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현재 약함. 이에 계속해서 그 자체적으로 왜 못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좁힐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와 줘야하고, 우리 자체 이슈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함

- 문화분권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 문화분권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스탠바이는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을 우리가 놓고 볼 때도 필요하지 않느냐. 구성원들이 자신감은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재단과 행정과 이런 지역사회 부분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아, 우리 스스로의 준비,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볼 필요 있음
-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책임·권한·의무가 톱니바퀴형으로 돌아가야만 거버넌스 효과가 창출될텐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가는 형태로 이슈를 맞출 필요 있음
- 인력 부분에서는 단위사업별, 프로젝트별, 공연기획별, 전시기획별 전문가 분들은 상당히 많으나 그 조직 전체를 보고 문화기획, 행정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를 어떻게 가서 그다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광역적인 초광역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잘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 촉매 인력 양성이 필요함

○ 문화분권, 문화 자치를 위한 역량 강화

- 문화분권을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 일부 창작 지원 사업들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2018년, 2019년 사이에 대략 한 4,500억 정도 지방 이양 사업의 항목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있음. 최근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정이 됐지만 이것을 3년 더 미룬다는 논의도 있음
- 지방분권의 과제라고 하는 특히 문화분권의 문제는 대립적 관점이 있음. ①지방 이양할 경우기초예술에 대한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정부의 책임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들 내에서도 사실은 사업에 대한 예시들만 있고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 있음. ②지역의 문제인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건이 나은 편인데 광역 도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게 될 때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 있음. 그런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예산들이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문제를 지방 이양의 부작용 또는 문화분권의 부작용이라고 보기 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음. 우리가 문화분권에서 문화 자치로 나아가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 내에서의 문화 자치역량이라고 하는 것 중요함. 지자체 역량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문화예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제도적 변화의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문화분권, 문화 자치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준비

역량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와 과제 마련 필요함

- 지방 이양을 준비하면서 지역문화재단들의 역량 강화 당연히 필요함. 그래서 현재 교육이수제도 등 실시하고 있지만 거꾸로 기획력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필요함. 만들어진 사업만 실행하기에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이 오히려 아까울 때가 있음
- 기초문화재단들은 끊임없이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수많은 진흥원으로부터의 사업과 그리고 새로 생기는 영역들, 지자체에서 요구받는 사업, 문체부로부터 또 새로운 사업들, 그랬을 때 사실 이제는 기초의 인력 조정은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일이 내려왔을 때는 비정규직이 됨
- 다양한 사업을 실행해야하는 기초문화재단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과 안정적 인력 보완이 함께 되어야 함. 지난번 전지연이 제안했던 내용이 지역문화뉴딜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인 지원센터” 예술인 지원 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종합 지원센터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특히 기초재단과 광역에서의 예술인지원 기능은 사업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임
- 행정과의 관계는 영원한 숙제임. 앞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지자체 자체에서 문화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하고 정책적 협의를 하는 주체나 단위가 있어야 함. 그래서 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문화청, 문화 특보 등 지자체에 맞게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함

○ 문화의 역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문화가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대단히 많은 가치들이 상승해 있음. 노동권이라든가 인권, 다양한 권리들의 가치를 문화가 끌어올려 줄 필요 있음. 문화재단들이 낙후돼 있는 이런 행정이나 제도나 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은 끌어올려주고 적절한 인력과 지원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함
- 예술인복지법 관련해서,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있었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약간의 창작지원금 내지는 계기적 지원금,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예술 활동증명이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이슈도 있음. 지금 창작지원이라고 협의화 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임. 이에 예술인 지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제도적 운영을 지속하게 됐을 때 정말 본래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전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역과 광역단위에서의 전면적인 고민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지역문화진흥원 다양한 국가 중간 매개조직의 공모사업의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차이는 있음.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재단들, 또는 기초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작지원사업의 변별력에 대한 사항이지만 제도적 개선점들을 마련해가는 그런 논의 마련 필요함

부록

□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영상

* 웹세미나 생중계 FULL 영상 ▶ https://youtu.be/tgTUZHTFwEs

□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속기록(별첨)